

지속성장 Report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ck1009@korcham.net)

국 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산업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복원해야 하지만 국내 산업생태계는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10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정체되고 기업의 신생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창업 이후에도 기업이 성장(Scale-up) 하지 못하고 있다. 역동성 저하 현상은 특히 고위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신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창업의 대부분이 저부가 생계형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의 역동성 저하는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시장에 혁신적인 기업 출현이 줄어들면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들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산업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도 문제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젊은 기업 숫자가 줄어들면 경제에 필요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다. 산업역동성 저하는 사회 갈등도 심화시킨다. 기업의 진입 및 퇴출 저하로 노동부문 간 이동성이 낮아지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 저부가 업종에서는 생산성 낮은 기업이 퇴출당하지 않고 존속하며 과당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영업자 수익성이 낮아지며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국내 산업의 역동성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창업 활성화'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R&D효율성 제고,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한 민간 종합 경제연구기관이다.



제 2021 - 07호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ck1009@korcham.net)

I. 연구배경

II. 역동성 현황

III. 역동성 저하 영향

IV. 대응방안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Growth Initiative)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연구배경

□ 국내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가 간 치열한 산업 경쟁에 노출

○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2019년 연평균 2.9%로 금융위기 이전 2000~2007년 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

○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겪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 중반¹⁾으로 낮아짐

* 국내 잠재성장률 :

2015~19년 2.7% → 2020~24년 2.3%

○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신산업을 개척해가는 선진국과 넓은 내수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통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한 산업의 신진대사가 지적

○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 왔음²⁾

○ 이러한 노력에도 국내 경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생겨난 기업도 과거보다 성장 속도가 더딤

□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 활력 제고와 혁신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

○ 역동적인 경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그리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

○ 이러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이 직면한 역동성 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역동성 현황

1. 전산업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에서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지수를 추정해보면 70~80년대의 경우 제조업, 90~00년대는 서비스업에서 산업구조가 역동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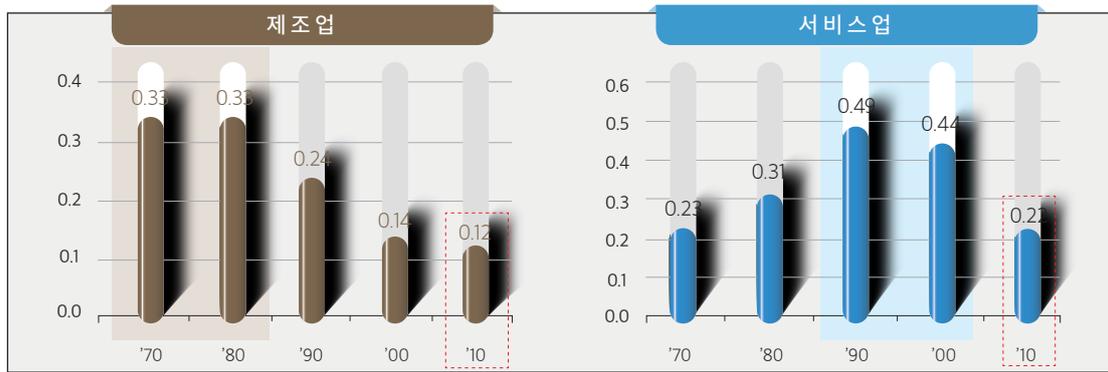
○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가 모두 정체됨

○ 2010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지수를 OECD 35개 국가와 비교할 경우 27위에 불과

1) 대한상공회의소(2019),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2) 참여정부(2003년) 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명박 정부(2008년) 17대 성장동력산업, 박근혜 정부(2015년)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문재인 정부(2017년)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그림 1〉 국내 산업별 산업구조 변화지수 추이



자료 : OECD 자료 이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전산업을 14개 업종으로 분류한 후, 해당 기간에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증감의 절대값을 연평균으로 환산

□ 최근 기업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생률과 소멸률³⁾ 역시 하락

- 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09년 15.1%까지 하락한 이후 등락을 거듭
- 국내 경제는 2014년 이전까지 비교적 퇴출이 원활하게 일어났으나 이후 기업의 소멸률이 크게 하락
-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는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역동성은 중요

□ 창업(Start-up)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창업 이후에도 과거와 달리 기업이 고성장세(Scale-up)를 보이지 못함

- 활동기업 대비 고성장기업(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비중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로 감소
-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하는 가젤기업*(업력 5년 이하의 고성장기업)의 비중 역시 크게 줄어들

* 가젤기업 비중 : 2009년 2.6% → 2019년 1.8%

○ 기업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약화

〈그림 2〉 전산업 신생률 소멸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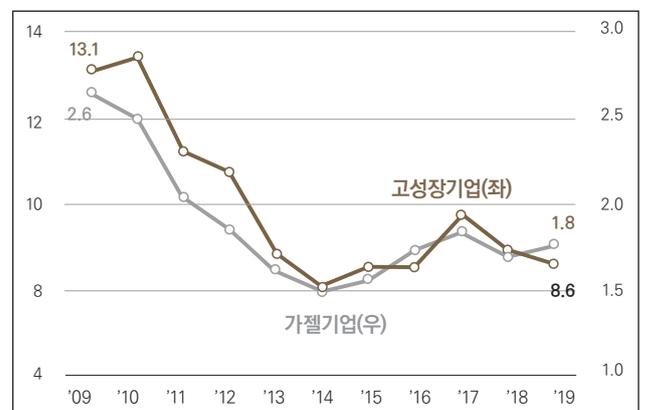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신생률은 t 연도의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중이며 소멸률은 t 연도의 활동기업 대비 퇴출기업 비중을 의미. 활동기업의 경우 영리기업 중 해당연도 매출액 또는 상용종사자가 있는 기업으로 정의

〈그림 3〉 고성장기업 / 가젤기업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1) 고성장기업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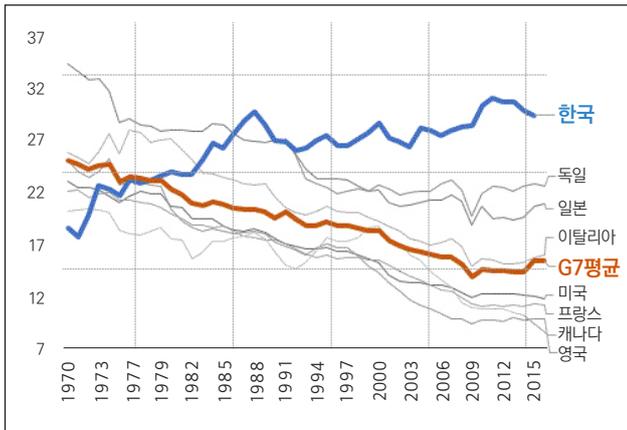
2) 가젤기업은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인 기업

2. 제조업

- 국내 경제는 서비스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지속
 -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할수록 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가 촉진되나 한국의 경우 최근까지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 지속
 - 국내의 경우 전산업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기준 30.4%로 주요 선진국들인 독일(23.3%), 일본(16.6%), 미국(11.2%), 영국(10.2%) 등 보다 크게 높음
 - 다만 국내 산업을 견인하던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는 2010년부터 정체되는 모습

〈그림 4〉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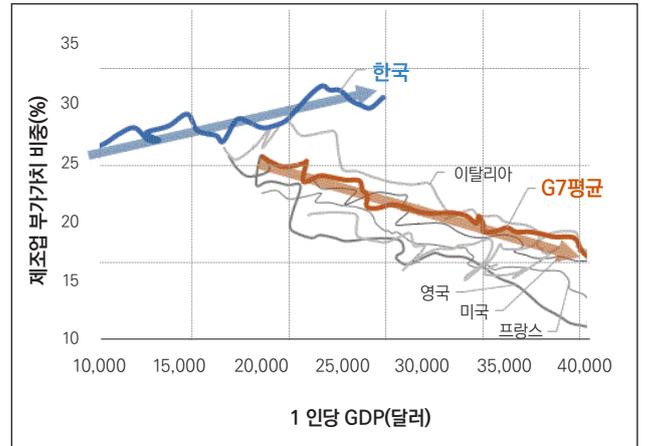
(단위: %)



주: 전산업 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명목 부가가치기준)
자료: OECD

〈그림 5〉 경제 성장과 제조업 비중

(단위: %)



주: 1) 1인당 GDP는 2010년 고정가격 기준
2) 독일은 1991년 이후 자료만 반영
자료: OECD, World Bank

- 그런데 최근까지 국내 경제를 견인하던 제조업에서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1년 11.2%였던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5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9년 8.9%까지 낮아짐
- 서비스업의 신생률은 2011년 15.8%였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 기준 16.0%로 소폭 상승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산업의 역동성 하락 현상은 제조업에서 창업이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

〈그림 6〉 제조업 신생률

(단위: %)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제조업을 기술수준별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위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신생률이 급격하게 하락
- 고위기술 제조업 중 대표적인 수출주력 업종인 전자·컴퓨터·통신 부문의 신생률*이 크게 하락
 - * 고위기술 업종별 신생률(2011년→2019년) :
 전자·컴퓨터·통신 15.0% → 7.7%,
 전기장비 10.3% → 7.9%,
 의료·정밀기기 10.3% → 7.3%
- 이로 인해 비교적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고위 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2019년 7.7%까지 낮아짐
- 반면 음식료·담배, 섬유·가죽 등이 포함되는 저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최근 반등하며 2019년 9.9% 까지 높아짐

〈그림 7〉 기술수준별 제조업 신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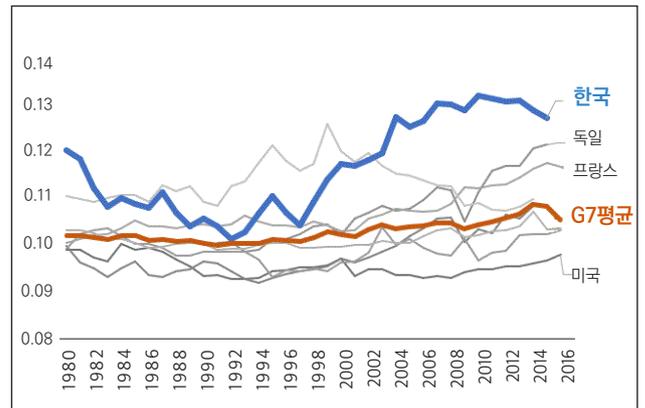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고위기술 제조업은 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업

-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성장으로 국내 제조업은 다각화되지 못하며 위기에 취약한 구조 가짐
- 주요국들과 제조업 내 산업 집중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G7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
- 전자, 철강, 운송, 기계장비 등 4대 주력 업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60.9%
- 특정 업종에 산업구조가 집중될 경우 향후 특정 산업의 경기 사이클과 성장성에 국내 경제의 방향성이 좌우됨

〈그림 8〉 제조업 내 산업 집중도 추이



주: 부가가치 비중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면 1에, 전체 세부 업종(n=13)에 균등하게 분포하면 1/n에 가까워지는 지표, 0.077 ≤ 집중도 ≤ 1

자료: OECD

4) 고위기술 제조업 : 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중위기술 제조업 : 화학제품, 기계·장비, 운송장비, 석탄·석유제품,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
 저위기술 제조업 : 음식료·담배,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 기타

3.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신생률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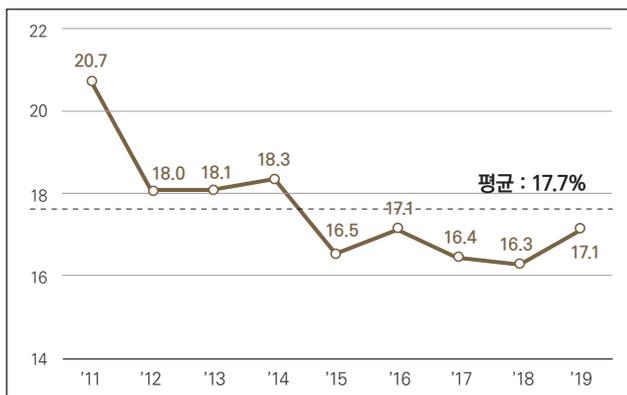
- 서비스업 신생률은 2011년 15.8%에서 2019년 16.0%로 큰 변화 없음

□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⁵⁾의 신생률은 큰 폭으로 하락

- 고부가 서비스업의 신생률은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3.6%p 하락
- 반면 동기간 저부가 서비스업⁶⁾의 신생률은 2011년 15.8%에서 2019년 16.0%로 +0.2%p 상승
-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 창업에서 도소매(23.6%), 음식숙박(19.6%), 부동산임대업(28.8%)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절대적임
- 기존 사업체에서 퇴출된 인력이 노동집약적이며 진입장벽 낮아 창업이 쉬운 저부가 서비스업에 과다 진입함에 따라 과당경쟁이 초래

〈그림 9〉 고부가 서비스업 신생률

(단위: %)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 고부가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업

5) 고부가 서비스업 :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6) 저부가 서비스업 :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교육, 보건·복지, 스포츠예술 등

□ 영세 서비스업 위주의 창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

- 대규모(10인 이상)로 창업하는 기업수 줄어든 반면 소규모(10인 미만) 창업은 오히려 증가*

* 규모별 신생기업수

(10인 이상) 2011년 10,742개
 → 2019년 10,005개 (△737개)

(10인 미만) 2011년 79.9만개
 → 2019년 98.7만개 (+18.8만개)

- 기업규모별로 창업 증가율(2011~2019년 연평균)을 산출해보면 1인(2.5%), 2~4인(5.8%), 5~9인(2.7%) 증가, 10~49인(-4.6%), 50~99인(-8.3%), 100~199인(-13.3%), 200~299인(-13.3%), 300인 이상(-5.9%)에서 감소

- 10인 미만 신생기업의 경우 대부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서비스업에 창업이 집중*

* 산업별 창업 비중(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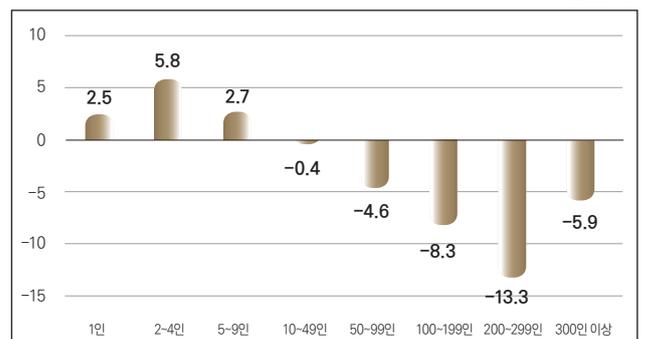
10인 미만 : 도소매 22.2%, 숙박음식 13.3%, 부동산 23.4%

- 진입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반면 소규모 기업은 기존산업에 파급효과 가지기 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체(5인미만)의 약 80%가 진입 시점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이재형·양정삼, 2011)

〈그림 10〉 기업규모별 신생기업수 증가율 (2011~2019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 연평균 증가율

□ 법인 기업의 신생률*이 최근에 빠르게 하락한 반면
생계형 성격이 강한 개인 기업은 신생률이 증가

* 기업 형태별 신생률

(법인) 2011년 12.6%

→ 2018년 11.0% (△1.6%p)

(개인) 2011년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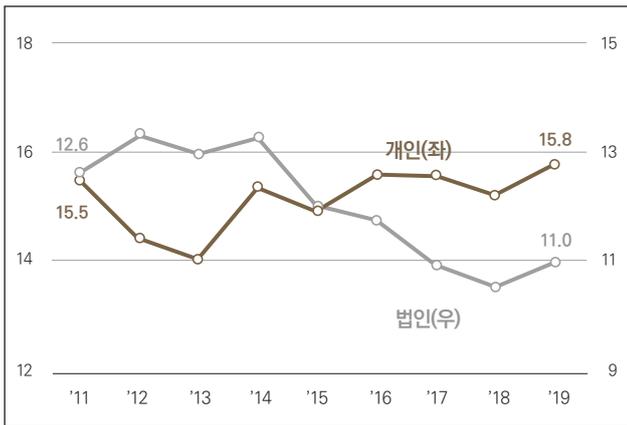
→ 2018년 15.8% (+0.3%p)

○ 진입기업이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혁신을 통한
산업의 건강한 신진대사에 기여하지 못함

○ 개인기업 창업은 대부분 저부가 서비스업에 많이
분포하며 경쟁력 있는 사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 높음

〈그림 11〉 법인 및 개인 신생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경기침체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되었으나 저금리 기
조 장기화로 이자부담 줄어들며 한계기업 증가

○ 실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2.1%p 늘어남

○ 한계기업 생산성의 경우 정상기업의 48%(2010~
2018년 평균) 수준에 불과⁷⁾

□ 한계기업이 늘어날 경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
하고 산업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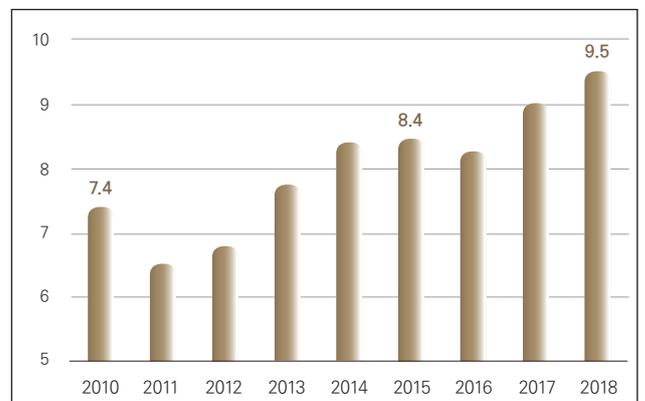
○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 출현이 줄어들 경우 신기술
도입 및 기업 간 경쟁 등 감소

○ 한계기업 증가는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물
적·인적자원 이동을 제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하
여 정상기업의 투자 및 생산성에 악영향 미침

○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상환하기도 힘든 한계
기업은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유형자산과
R&D, 교육 등 무형자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 생
산성이 낮음

- 한계기업 비중 1% 증가는 정상기업의 투자 증가
율을 0.12%p, 고용증가율 0.21%p, 노동생산
성을 0.31%p 각각 감소⁸⁾

〈그림 12〉 제조업 한계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주: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III 역동성 저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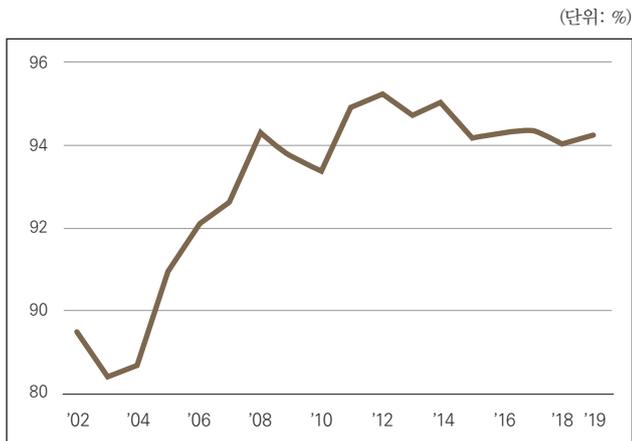
1. 성장잠재력 약화

□ 경쟁에서 뒤쳐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며 전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7) / 8) 송상윤(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이슈노트 제2020-7호, 한국은행

-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에서 기업들은 신규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선호
- 한계기업의 투자증가율*은 △0.1%에 불과하여 정상기업 +2.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⁹⁾
 - * 투자지출은 전기자산 대비 유형자산 순증분과 감가상각비 합으로 정의
-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실물 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용함
-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은 2000년대 80% 후반에서 2019년 94.3%까지 증가

〈그림 13〉 사내유보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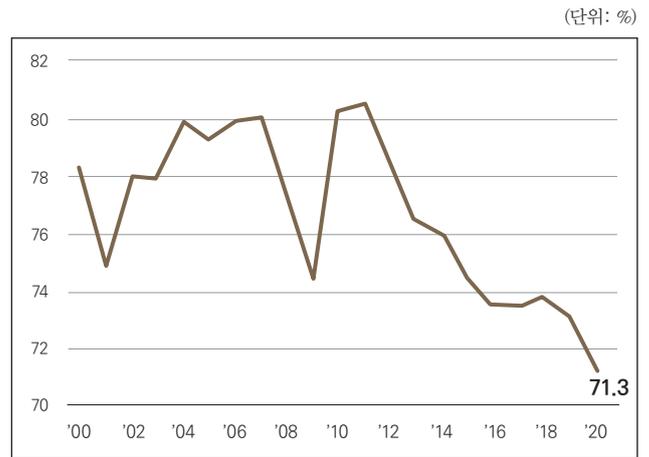
주: 사내유보율=사내유보/미처분이익잉여금

- 유희설비 증가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신산업 출현이 지연되며 주력산업 편중화 심화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20년 71.3%까지 낮아졌으며,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12.4%에서 2010년 9.6%, 2020년 8.9%까지 추세적으로 하락
- 5대산업(전기전자, 화학, 기계장비, 1차금속, 운송장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5대산업 부가가치 비중(GDP대비 %) :
1970년 5.4% → 2000년 17.5% →
2020년 18.6%

-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 증대 커지며 국내 경제의 취약성 확대

〈그림 14〉 제조업 평균가동률



자료 : 통계청

주 : 평균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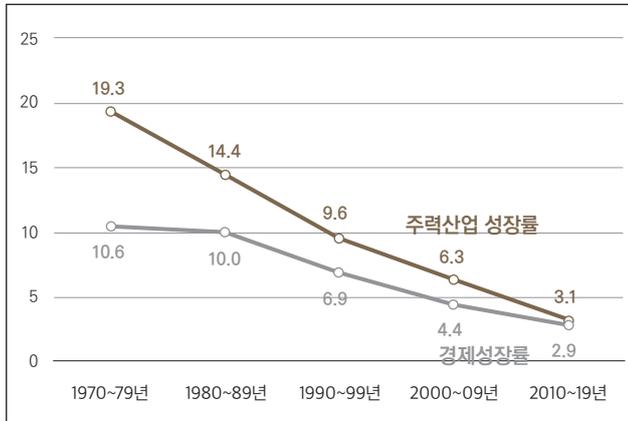
- 국내경제를 이끌던 주력업종마저 산업성숙기 진입으로 성장률 둔화
- 주력산업은 산업사이클 상 성숙기에 진입하며 투자의 한계생산성¹⁰⁾ 하락*
 - * 주력산업 한계생산성(2000년→2018년):
전기전자(0.21→0.14), 기계장비(0.17→0.13),
화학(0.15→0.12), 운송장비(0.17→0.11),
1차금속(0.10→0.09)
- 국내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던 주력산업 성장률 하락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
 - 90년대 이전 10%를 상회하던 주력산업 성장률은 2000~09년 연평균 6.3%에서 2010~19년 연평균 3.1%까지 낮아짐

9) 김천구(2019),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SGI Report, 대한상공회의소 SGI

10) 한계생산성은 자본을 한 단위 더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으로 정의. 자본의 한계생산 계산방식은 김대수·전봉걸(2007)을 참조

〈그림 15〉 주력산업 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
 주: 주력산업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장비, 1차금속, 운송장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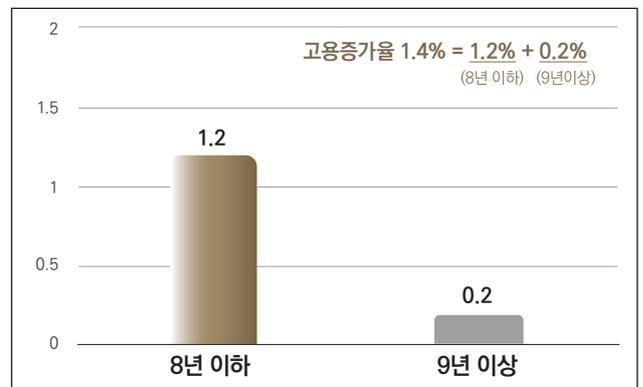
2.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고용 창출력이 높은 젊은 기업(young firm)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기업의 고용창출은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숙 기업(mature firm)의 고용 창출 능력은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¹¹⁾
 - 실제로 2018년 고용증가율인 1.4% 중 창업한지 8년 이하 기업의 고용증가율 기여도는 1.2%p인 반면 9년 이상 기업은 0.2%p에 불과
 - 이것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되고 산업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 저부가, 소규모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창업이 늘어나며 고용의 질도 악화

- 최근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진입이 용이한 저부가업종에서 창업이 집중
- 우리나라의 전체 창업 기업 대비 도소매, 음식숙박 창업 비중은 2018년 기준 39.0%로 스페인(36.3%), 이탈리아(34.5%), 독일(30.1%), 영국(26.0%), 프랑스(25.6%) 등 주요국 보다 훨씬 높음

〈그림 16〉 기업 연령별 고용증가율 기여도(2018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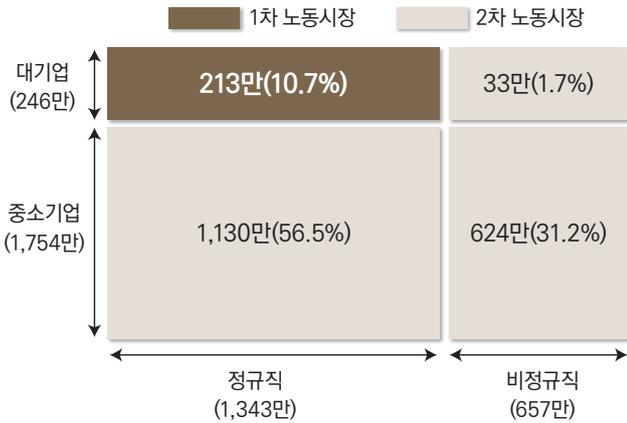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8년 광업·제조업 기준

3. 사회적 갈등 심화

- 기업의 진입·퇴출 저하로 노동부문 간 이동성이 낮아지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공고화
 - 국내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낮은 유연성)이 2차 노동시장(낮은 안정성) 보다 임금 수준과 근속년수 등이 월등함
 - * 1차 노동시장(대기업 and 정규직) vs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or 비정규직)
- 국내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1, 2차 노동시장 간 이동은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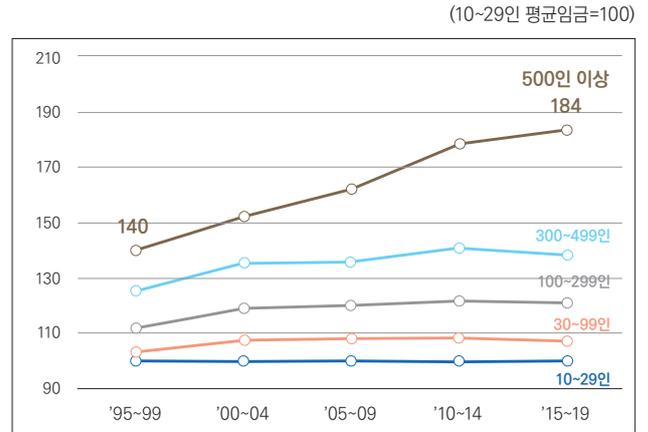
11) Haltiwanger et al.(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그림 17〉 1·2차 노동시장 근로자수 및 비중(2017년)



자료: 한국은행
 주: 대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기준

〈그림 18〉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주: 10~29인 기업의 평균임금(=100)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

〈표 1〉 고용형태별 이동 비율

		To			
		정규직	임시직	자영업	미취업
From	정규직	92.5%	1.4%	0.9%	5.1%
	임시직	4.8%	81.4%	1.7%	12.2%
	자영업	1.3%	2.2%	92.1%	4.4%
	미취업	3.6%	4.1%	0.9%	91.4%

자료: Schauer(2018)
 주: 노동패널 자료(2013~2014년)로 계산

□ 창업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

○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큼
 - 전체기업 중 0.2%에 불과한 대기업은 매출액은 47.3%, 영업이익 64.1%를 점유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차이로 대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급증한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임금 상대적으로 정체*

* 기업규모별 임금 비교(500인 이상 기업/10~29인 기업) : 1995~99년 1.40배 → 2015~19년 1.84배

□ 활발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며 기존 기업의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 심화

○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지며 청년실업의 만성화 및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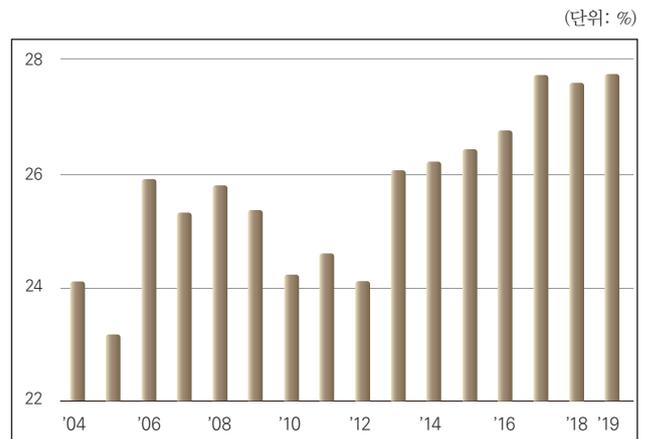
- 전체 취업자중 첫 취업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2019년 기준 27.7%를 차지

- 청년실업률(기간평균)은 2001~10년 7.7% 에서 2011~20년 8.8%로 증가

○ 기성세대의 경우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

○ 기존 일자리를 지키려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 심화되고 청년층은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

〈그림 19〉 첫 취업 소요기간 장기(1년 이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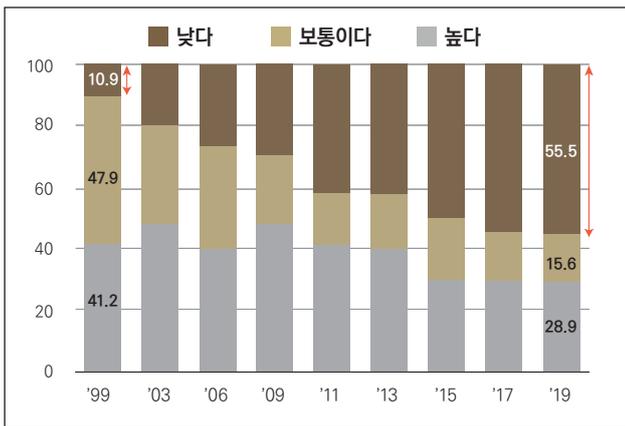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전체 청년 취업자 대비 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비중

□ 계층 간 이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소득불평등 고착화

-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인식이 매우 낮음
-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
- * 지니계수¹²⁾: 1990년 0.266 → 2000년 0.279 → 2010년 0.315 → 2016년 0.317
-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점차 고착화

〈그림 20〉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주1)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응답
 2) 보통이다 응답은 모르겠다 응답을 포함

4. 저부가 부문 경쟁 심화

□ 진입이 쉬운 저부가 업종에서 창업 이루어지고 기존 기업은 비효율적이어도 살아남으며 이들 업종의 과당 경쟁 심화

- 1km²당 소상공인 수로 측정한 소상공인 밀집도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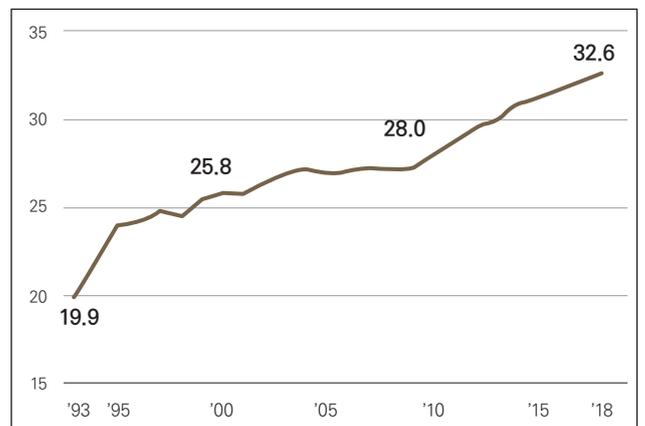
- 소상공인 밀집도(km²당 개수)는 2000년 25.8개에서 2010년 28.0개, 2018년 32.6개까지 증가

- 특히 저부가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소상공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밀집도 상위 업종(km²당 개수) : 도소매 8.9개, 숙박음식 6.5개, 협회단체 3.8개, 운수창고 3.7개, 제조업 2.8개

〈그림 21〉 소상공인 밀집도 추이

(단위: km²당 개수)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
 주: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4인 이하 사업체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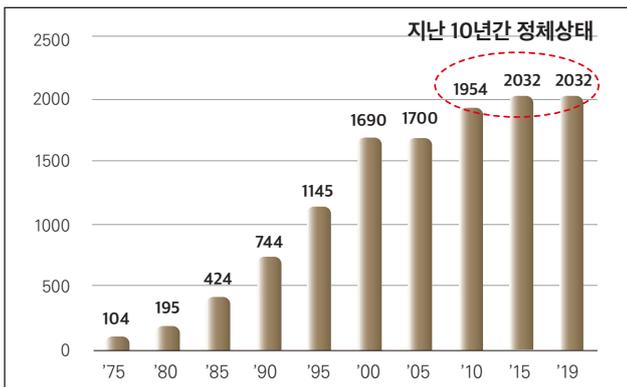
12)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이며 0에 가까우면 평등한 경우 1에 가까우면 불평등도가 높음. 도시 2인 이상 가구 대상이며 시장소득 기준

□ 경쟁심화로 자영업자의 수익성 저하

- 수익성 낮은 업종에 자영업자가 과다 분포하며 이들의 소득여건이 악화
- 주로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뜻하는 가계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2.2% 감소
- * 가계 영업잉여 증가율(% , 기간평균) :
1980~89년 15.5% → 1990~99년 10.8% → 2000~09년 1.0% → 2010~19년 0.4%
- 특히 즉 저생산 부문이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그림 22>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

(단위: 만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가계 영업잉여/자영업자수

IV 대응방안

-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2010년 이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기술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신생률이 저하
- 산업 역동성 저하는 성장 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적 갈등 심화, 저부가 부문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
-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갖춘 신생기업의 등장,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기존 기업의 혁신역량 구축을 통해 가능
- 혁신 기업의 진입은 산업의 경쟁 촉진시키고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생산요소(고용, 투자 등)가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해 갈 필요
- 기존 기업들 역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1. 창업 활성화

- 활발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
-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의 물결 밀려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사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일일이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국민 생명·안전에 문제 되는 것 아니라면, 우선허용, 사후보완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틀로 전환

□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

○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

- 산업연구원(2021년)에 따르면 창업 당시 창업자금의 구성은 정부지원금(35.0%), 은행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이지만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의 벤처자금 활용은 8.9%에 불과

○ 민간에서 참여가 부족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운영

- 금년부터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 창업 이후 기업의 고속 성장 뒷받침할 정책 마련

○ 국내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예비창업 초기 단계에 몰리는 경향 있으며 지원 분야 역시 한정적

- 정부의 창업 지원 관련 예산은 '21년 1.4조원인 반면 스케일업 지원에는 0.4조원 계획

○ 창업지원 예산 대비 부족한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다양화

- 현재 스케일업 지원프로그램은 스케일업금융¹³⁾(2,700억원), 창업도약패키지¹⁴⁾(1,020억원) 등

○ 창업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가치평가 등 이연하고 미래지분 취득권리 부여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¹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는 투자자보다 창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구조, 후속 투자 없을 경우 투자금 보장되지 않는 등 이유로 활용도 아직 높지 않음*

* 현재 산업은행 아크 등 4개기업 55억원, 기업은행 씨에이랩 3억원 투자에 불과

□ 창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 내 창업 및 분사 분위기를 현재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

- 기업 내 창업 및 분사는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패해도 리스크 적음

○ 재창업자에게 자금 및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실효성 높임

- 2016~2020년까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 집행률은 22.1% 불과(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 처분가치가 낮은 무형자산에 대한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임치, 신탁, 매매 등을 통해 기업도산으로 인한 기술 사장 방지

2.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 한계 기업의 축소 및 적기 퇴출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

○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위기의 발생원인별로 추진 방식을 상이하게 적용

13)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14)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15)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투자계약방식.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되며 국내 도입

-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경우는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으로 자생력 갖도록 유도
 - 산업내 공급과잉, 산업 사이클상 쇠퇴기한 경우 정부 주도로 신속·과감하게 대응
 - 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고용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육성 통해 기업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불가피한 구조조정 대비하여 고용안전망 강화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해소
- 우리나라는 매우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가짐*
 - *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2019년) : 141개국 중 고용 및 해고 유연성 102위, 국내이직 용이성 70위
 - 현재와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자가 해고될 경우 타부문으로 인력이 신속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반발 심함
 -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충분한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3. 혁신역량 강화

- 성과 측면에서 부족한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독려
- 국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8% (2018년)로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미흡
 - 국내 R&D투자 성과 측면에서 출원 특허의 인용도, 삼극특허, 미국등록 우수특허 비율 등 낮은 수준

-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자율적·전략적 R&D 수행 환경을 조성
 - 예를들어 자유공모과제 등 상향식 과제 지원 확대
 - 출연연과 기업 간 산·학·연 협력제도 실시 강화
 - 정부 R&D 투자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R&D의 불확실성 감수함으로 시장의 과소투자 보완
 - 현재 국내 정부 R&D는 실패 위험 감수보다는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정부R&D 성공화율은 96%)
-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등교육체제 정비, 미래 인재 핵심역량 개발
-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지원, 해외 우수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 국제공동연구 등 통해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델로이트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배경으로 창의적 사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시스템과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이라고 설명
 - 미국은 2002년부터 카네기멜론대에 머신러닝학과를 개설하고 미래 핵심분야에 최고급 인재 양성
 - 산학협력 강화, 일학습병행제¹⁶⁾ 등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공급에 주력
 - 기업이 대학과 협업하여 실무중심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
 -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하고 은퇴예정자 전직 지원훈련 심화

16)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한 후 기업에서의 현장 훈련과 학교훈련센터의 이론교육 진행하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참고문헌

- 구정한·이규복(2021),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KIF 금융분석리포트 2010-03, 한국금융연구원
- 김대수·전봉걸(2006), “최근 우리나라 설비자본의 효율성”, 금융경제연구 제284호, 한국은행
- 김천구(2019),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SGI Report, 대한상공회의소 SGI
- 박정수·김천구(2019),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113권, 텔코경영연구원
- 배두현(2021),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지속성장 Report, 대한상공회의소 SGI
- 선병수(2021), “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 현황 및 정책제언”, 지속성장 Report, 대한상공회의소 SGI
- 송상윤(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이슈노트 제2020-7호, 한국은행
- 양현봉(2021), “기업발 스피노프 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산업경제이슈 제106호, 산업경제연구원
- 오삼일·이상아, 김달현(2020),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 이병기(2015),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KERI Brief 2015-02, 한국경제연구원
- 이원복(2019),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 역동성 저하 추이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5월호, 산업연구원
- 이재형·양정삼(2011), “영세사업자 실태 분석”연구보고서 2011-08,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동(2015),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5-17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정익·조동애(2017),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조사통계월보 5월호, 한국은행
- 장근호(201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경제분석 제25권 제1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조윤정(2020),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77호, 산업은행
- 허정·박정수·김천구·정지은(2018),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보고서, 한국경제학회
- Haltiwanger, J., R. S. Jarmin, J. Miranda (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2): 347-361
- Schauer, J. (2018),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IMF Working Paper No. 18/126, IMF